

#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대책

## Strategic Approaches of Medical Field against Establishment State-run Nat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강 승 완 | Seung-wan Kang, MD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보완대체의학연구소

Institut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Medical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drdemian@naver.com

J Korean Med Assoc 2007; 50(4): 292 - 294

### Abstract

The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a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despite strong opposition from medical field. By establishing a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the Government aims at educating competitive healthcare professionals in research to meet fast-changing medical circumstances such as aging society, increasing chronic diseases, public interests in alternative medicine and its evidence-based approach. The Government is also taking this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by settling a collaborative treatment system between western and orinetal medicine as well as fostering oriental medicine into high value-added industry. However, it raises a concern that evidence-based approach and standardization of oriental medicine through establishment of a graduate school might leave little room for oriental medicine doctors who depend mainly on traditional experiences and thus lose their leading roles in oriental medicine. Field of western medicine is no exception. If they continue to neglect scientific research in orient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he leadership of integrative medicine will shift to oriental medical doctors equipped with scientific knowledge. The situation asks medical field to take active steps and show their propose on education model is more competitive by achieving excellent research results through establishment of research center for orient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within the framework of medical college education.

**Keywords :** Oriental; Complementary; Alternative; Integrative; Medicine

**핵심용어 :**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키로 확정하였으며 올 2월, ‘2008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의료 일원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고 지방의 여러 국립대학교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시대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위해 먼저 일련의 한의학 관련 정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방 육성사업은 대부분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역사는 비교적 짧으나 그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한방 R&D 기금은 주로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며 투자 규모는 2002년도 101억원, 2004년도 160억원으로 BT 분야 R&D 대비 2% 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2005년도 들어 406억원으로 급증하였고, 98년도에 제정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Project 2010은 2010년까지 총 1,471억원의 투자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여당 내에는 ‘전통의학 발전 특별위원회’가 있고 법률적으로는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차관 직속의 한방 정책관, 보건산업진흥원에는 한방 R&D 팀, 대전에는 과기부 산하의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어 한의학의 국가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생산,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가가 한방 육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적절히 억제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보건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현대의학과의 convergence

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06년도 대한보완통합의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전 국민의 67%가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약 5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제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한 제도권으로의 수용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인다. 한의계의 경우 한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은 연구가 아닌 개업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왔지만 한의학대학의 연구 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아직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통의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를 위한 한방의 과학화를 주장해 왔지만 과연 지금 한의계가 한방의 과학적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의료계는 어떠한가? 최근까지도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 및 각종 보완대체요법의 가치를 일관되게 부정하여 왔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어떤 과학적 연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근거란 과학적 연구를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인데 정작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또한 의료계엔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연구에 대한 의지도 연구인력도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할진대 정부에 한의학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의학 육성의 일환으로 한의학 R&D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놓은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은 그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나, 아니냐를 떠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내세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의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고령화 사회, 난치성 질환 증가,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고조, 과학화, 산업화 요구 증가 등 21세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임상-주로 개업-중심 한의학 인력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탈피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새로운 인력양성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둘



째, 양·한방 협진 체제를 점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전기를 마련하고, 셋째, 신약 개발, 한방의료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한 의학을 미래 고부가가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신입생 모집 기본계획에서 모집정원 총 50명 중 44%에 해당하는 22명을 의사 등 각종 면허증 소지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예상하기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의료계의 우려와도, 한의사들의 기대와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의계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높이고 의료 일원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전통적 경험에 의존하던 한의사들은 매우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한의사들만이 한 의학을 독점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의료계 또한 더 이상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외면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직면할 ‘Integrative Medicine’ 시대의 주도권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한의사 측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그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단, 이젠 이것이 반대를 위한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립 한의학전문대

학원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둬으로써 우리의 모델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작년에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산하에 보완대체의학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과 시류에 편승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모두 경계하며 냉정한 과학적 검증과정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잠재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서울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초 및 임상연구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한의학 전문대학원이나 한방 R&D 센터를 따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한의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산대에 한의학 전문대학원과 한방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듯이 의료계가 뜻을 모아 서울대학교 보완대체의학연구소가 정부로부터 보완대체의학 R&D 센터로 지정 받아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각종 연구를 정부지원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더 타당한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곧 도래할 ‘Integrative Medicine’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한의계가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해주길 부탁드리며 다음의 명제를 함께 고민하였으면 한다.

‘과학화된 한의학은 과연 전통의학인가, 현대의학인가?’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사들만의 숙제인가?’